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북한 인권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됐다.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북한인권법을 비난했다. 향후 남북관계의 고난을 예고한다. 통일 전 동독정권에 의해 가해진 인권 침해는 주로 동독의 체제 유지와 관련됐다. 생명권·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했다. 형사법은 체제에 반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생명 침해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경 탈출자에 대한 총기 사용이었다. 1949~1989년 국경수비대의 총격에 의한 사망자 숫자는 200여 명에 달한다. 지뢰와 자동발사장치에 의한 사망자도 300여 명에 이른다. 일방적 사법절차에 의한 사형수도 45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동독정권은 체제 이념의 차이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했다.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의 대응·반발과 큰 차이가 없다.

동독은 1973년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했다. 1975년에는 유럽안보협력회의 창설을 위한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서명했다.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해 주는 대신 가족 상봉 및 재결합, 여행 및 자유 왕래, 인권 존중,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증대를 명시했다. 동독의 체제 변화를 이끌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서독은 초기에 국제기구나 국제법의 원칙, 합의 등을 통해 동독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서독은 차츰 양독 간의 합의에 의한 동독의 인권 개선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인권 문제의 직접 제기보다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점진적인 인권 개선 정책으로 전환했다. 동방정책 비판론자들은 동방정책이 동독 정권 유지에 기여했으나 동독 주민들의 인권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동방정책이 양독 간 교류의 다리를 놓고, 동독인들이 서독을 동경하고, 동독 내에서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이 싹트게 된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독의 대동독 인권 정책 사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네 가지의 시사점을 던져 준다. 첫째, 당국 간의 대화와 민간급의 교류가 선결조건이다. 대화 없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교류 없이 인권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렵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대북 인권 접근은 북한의 반발과 거부감만 쌓일 뿐이다.

둘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적이면서 함께해야 할 민족이다. 미국은 세계 강대국으로서 인권의 보편성만 강조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도구로 활용한다. 미국은 북한이 적이지만 함께해야 할 민족은 아니다. 대북 인권법을 미국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일본의 대북 인권법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압박의 도구로 탄생했다. 납치자 문제가 해결되면 효용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북 인권법에 대한 우리의 잣대는 불분명하다.

셋째, 정치 문제와 인도적 문제의 분리이다. 인권은 자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도 있다. 탄압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치료받으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병들어 가는 노약자에게 시급한 인권은 의약품과 식량이다. 인도적 지원이 없는 한국·미국·일본의 대북 인권 문제 제기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일부 보수론자들이 북한 주민들이 더 아프고 더 배가 고파야 김정은 정권에게 저항한다는 주장은 논리가 아니라 궤변이다.

넷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이고 미국과 중국은 주변국이다. 역사적 경험은 남북한이 대결하면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됐다. 역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미국과 중국을 협력자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남북관계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가 북미·북일 간 인권대화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우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인권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남북 간에 협력과 평화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남북 당국 간의 대화와 민간급의 교류,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관계의 단절 속에서 인권 개선을 외치는 것은 북한인권개선법이 아니라 대북압박법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교칼럼

조건이 많을수록 행복은 멀어지는 것

연 광
증심사 주지·광주불교연합회장

산사에 고요히 앉아 있자면, 바람이 휘이 하고 지나간다. 특히 대나무 사이로 훑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는 듣기가 여간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대나무가 움직일 때마다 마당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도 함께 움직인다.

하지만 아무리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과 섬돌을 쓸어내려도 마당 위의 티끌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림자가 아무리 움직인들 마당이 쓸어질리 있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달빛도 저 맑은 연못 밑바닥까지 환하게 비추어 준다고 하더라도, 물에는 달빛이 뚫고 지나간 자취가 남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비록 세상살이에 찌들고 시달려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본래 우리의 성품은 조금도 흐트러짐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불가(佛家)에서는 '참나, 본마음' 이라고 한다.

옛날에 젊은 청년이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스님에게 찾아가 물었다고 한다.

"스님, 저의 마음이 늘 근심, 걱정으로 편안치 않으니 스님께서 편안케 해주십시오."

스님이 말씀하길, "그 불편한 마음을 여기에 내어 놓아 보아라. 그럼 편안케 해주리라."

이 얼마나 간단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대화인가! 그 마음이란 것은 실체가 있다면,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체가 없다면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불안하다고 생각했을 뿐, 실제로 불안한 마음이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근심과 고통으로 얼룩져왔다고 생각할지언정, 실제로 근심과 고통으로 얼룩진 마음이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가 늘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마음, 초조한 심정, 혹은 망설이고 설레는 마음, 아니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 등등을 지니고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편안함을 희구하지만, 거기에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결코 마음 편안함을 충족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안정된 직업, 충분한 돈, 화목한 가정, 명예, 건강 등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한 것들을 두루 갖추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두루 갖추어야 행복을 느낄 것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이 70여 년 전 부터 미국 남성 724명의 삶을 해마다 추적해 직업과 가정생활, 건강상태를 데이터화했다.

로버트 윌딩거 교수는 그동안 축적한 724명의 인생 데이터를 통해 행복에 관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행복은 부나 명예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다른 이들로부터 고립돼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덜 느꼈고, 중년기에는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는 데이터도 나왔다.

반면, 가족, 친구, 공동체의 사회적 연결이 긴밀했던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렇듯 인간은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대상에게 늙거나, 병들지 않고, 또 죽지 않기를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 것만이 행복하리라고 믿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양하다. 찌는 듯한 더위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굳이 돈을 지불하면서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각자마다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가지로 조건 많은 행복은 충족될 날이 더더욱 희박할 것이다.

우리들은 왜 행복해지는데 그토록 많은 조건을 다는 것일까? 조건이 많을수록 행복은 멀어지는 것이다. 조건이 없을수록 행복은 가까워진다.

어느덧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기운이 옷깃에 스며드는 계절이 됐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고 들뜨면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민족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효사상이나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희미해져 가는 게 우리 현실이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어느 민족보다 조상과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컸다. 추석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묘소의 벌초를 정성껏 하는 일들이 모두 자연과 조상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었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짐을 하는 명절이다.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알 때 진정한 행복의 씨앗이 싹트는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 고

사드배치와 한·중 관계

김 하 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여름방학 기간에 중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만나는 중국인마다 사드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국이 왜 사드를 배치하느냐, 실익이 있느냐, 한·중관계는 어떻게 될 듯하냐"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혹스러웠다. 외교나 국방은 잘 모르는 분야라고 발뺌하거나, 남북관계는 미묘한 게임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중간의 정상회담 의제에도 사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고 보도되었다. 한국은 북한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국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감시와 견제 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형편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밀접해졌다. 민간차원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경제분야의 상호의존도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수출의 30% 가까이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마다 최소 600억불 이상의 흑자를 중국에서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류 열풍의 주무대도 중국이다.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12조원 가까이를 소비했을 정도이다.

2010년 G2로 부상한 이후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막강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지배력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세계 경기가 침체에 접어든 이후 각국의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브렉시트가 의미하듯이 영국도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도 쉽사리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간에 갈등이 고조되면 궁극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과 직결될 것이다.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는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진작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한 자본을 국내에 투자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도시 건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중국시장을 독점할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신도시 개발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그 폐해와 오류도 많지만, 이를 제대로 수정한다면 중국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기회들이 사드로 인해 다 날아갈 수가 있다. 자칫하면 한류(韓流)가 한류(寒流)로 급변할 지경이다.

그렇다면 사드배치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여겨진다. 북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지만 중국도 북핵문제를 골치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의 틀이 깨져버렸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활용하는 방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핵으로 인해서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중국과 논의했더라면,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으로 평생 밥벌어 먹고사는 처지이므로 중국편향적이거나 친중국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사드를 떠나서도 국내에서 누군가 중국을 비난하면 중국편을 들어서 해명하거나 변명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드 문제로 인해 한·중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익이 없다. 실제로 수도권 방어에도 소용이 없고, 24발씩 두 번 발사하는 48발로 쏟아지는 고고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국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드배치 문제를 성급히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미국도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처지가 안타깝기만,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모두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에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나 외교가 그런 것이 아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상호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사드배치를 반대하지만, 외부세력은 오지 말라는 성주에 가기도 그렇고, 잘못하다가 '종북'으로 낙인찍히는 것도 두렵기만 하다. 그래도 한·중관계를 고려하거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사드 배치는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社 說

지방의원 비리 방지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속돼 온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은 항상 골칫거리였다. 지방 행정 감시와 견제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사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각종 비리에 간여하고 불법을 저질러 물의를 빚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다 싶던 지방의원들의 불·탈법과 도덕성 실종이 다시 고개를 들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가 사법처리되는가 하면 함량 미달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질책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영표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사학 비리에 연루됐다가 구속 기소된 상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학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책을 내놓아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사회적 지탄이 큰 범죄에 가담해 지역 명예까지 크게 실추시켰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의원은 취업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최근 한 시의원은 시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측으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았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시민들의 손가락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최종 확정 판결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놓고 타당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제 지방의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해당 선거구민들이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탈선 수위가 의원직을 도저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인 이들은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폐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각 정당도 소속 의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출당 조치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도를 벗어난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 아예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설혹 나선다 해도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함으로써 자치현장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수라장 된 문화전당…부끄러운 5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센터 개소식이 큰 차질을 빚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탄 자국 등 5·18 흔적 복구를 놓고 5월 단체들과 문화전당 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광주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 개소식이 결국 국제적 망신 끝에 초라한 잔치로 전락했다.

지난 7일 5·18기념재단과 오월 단체 회원들은 문화전당 내 5·18민주평화기념관 3관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센터 개소식을 몸으로 막았다. 이들은 고성은 물론 책상과 의자 등이 나뒹굴 정도로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오월 단체들은 옛 도청 건물을 5·18기념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뜻을 문화전당 측이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선 것이라며 곧바로 천막농성에 나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문화전당 측은 이에 대해 문화교류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 종합계획 수립 당시 이미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설사 오월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거액의 복원 비용 마련이 어렵고, 개관이 한참 늦어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논란의 대척점에 선 오월 단체와 문화전당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나 대화의 노력 없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이러한 논란을 1년 이상 묵과·방조해 온 것이 이처럼 사태를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어찌 됐든 이번 사태가 자칫 '제2의 옛 전남도청 별관 사태'로 비화해 전당 운영 차질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광주시와 정치권, 지역사회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각계의 책임 있는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오월단체와 문화전당의 갈등을 끝내고 전당 운영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레드퀸 효과

영국의 아동문학가 루이스 캐럴이 1871년 발표한 장편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는 여왕 '레드퀸'이 등장한다. 체스판 모양의 마을에서 레드퀸은 앨리스의 손을 잡고 바람처럼 달려가지만,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를 묻는 앨리스에게 여왕은 대답한다. "여기서 같은 장소에 머물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단다. 어디론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상대에게 위협적인 전략이나 무기를 개발한다손 치더라도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우세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레드퀸 효과'(Redqueen Effect)의 유래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이기려는 자와 지지 않으려는 자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반에서 1등을 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공부를 하더라도 반 친구들 역시 새벽부터 일어나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압도적으로 앞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함께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승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군비경쟁처럼 어느 한쪽이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내면 곧바로 다른 한쪽이 또 다른 신무기를 만들어 내 결국엔 무한경쟁으로 이어진 상황이 좋은 예다.

지금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군비경쟁 역시 '레드퀸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에서 시작, 6월엔 무수단 미사일 그리고 지난달 말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5일엔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 역시 이에 대응해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배치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최근엔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검토하는 등 남북 간에는 새로운 군비 확장 경쟁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역사에서 보아 온 대로 군비 확장 경쟁은 무한경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제아무리 강력한 무기라 할지라도 평화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어렵더라도 북한이 더 이상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방안이 우선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